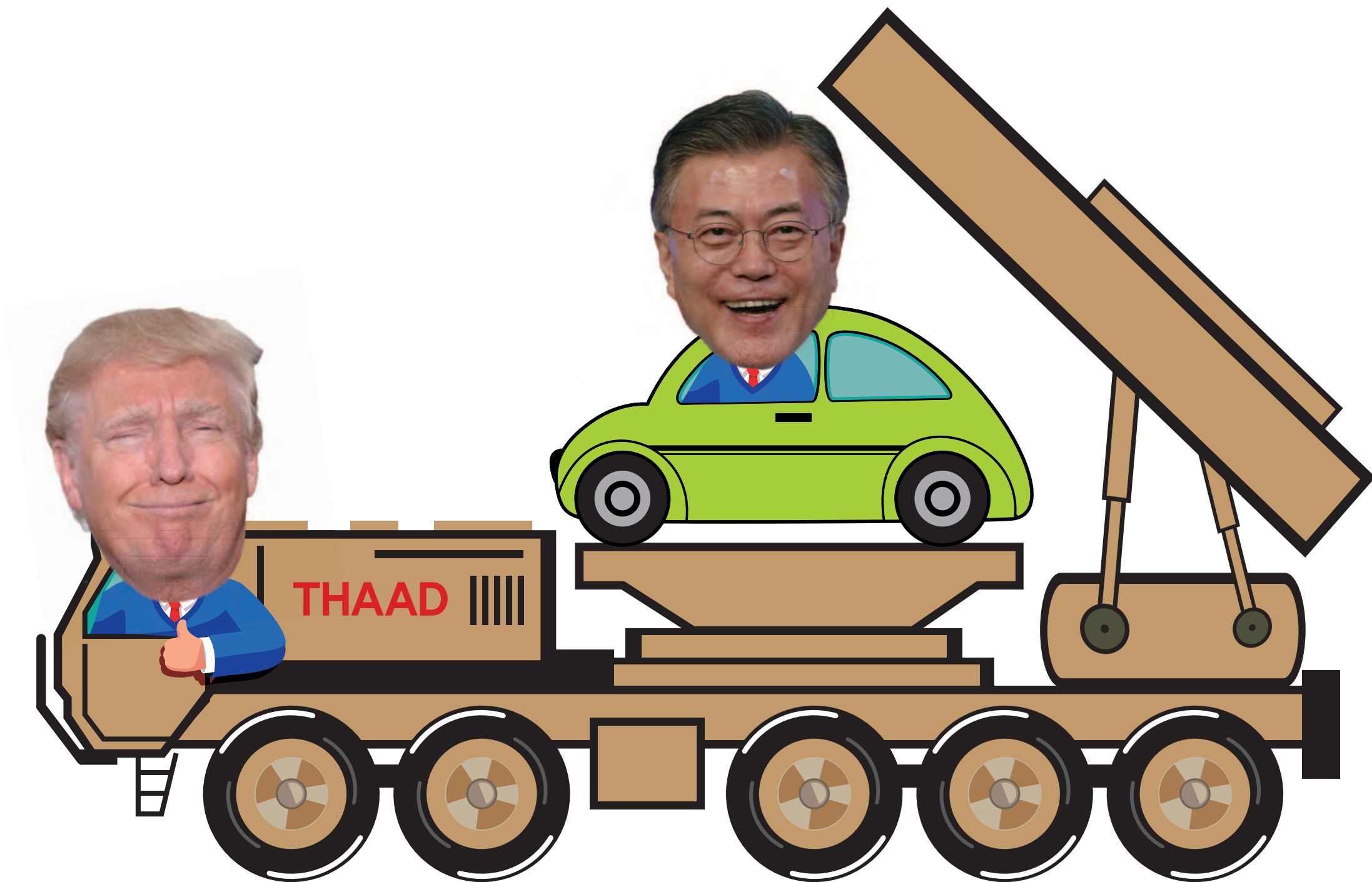


사드 배치, 대북 제재 강화...

미국이 전인하는 차의 운전석에 앉은 문재인



제국주의,
한반도 주변
정세, 사드

4~5면

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아동 학대의 근원

6~7면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8~9면

우익 쿠데타
위험에 처한
베네수엘라

11면

턱없이 모자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3면

탈핵을 60년 뒤로
미룬 문재인 정부

12면

8·2 부동산종합대책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확충하라

2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노동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엔 턱 없이 부족하다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려라

8월 2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고며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서울 중심의 집값 폭등 열풍은 단기적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성장과 지속된 저금리 정책 속에서 수익이 나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공급되면서 부동산 투기가 벌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도 부동산 투기를 잡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번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된 부산·대전 등으로 자금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역대 정부들은 경제 성장을 위한 부동산 시장 지원과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집값 폭등, 전월세 대란과 가계부채 급등 등을 반복해 왔다. 그래서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놓을 때도 부동산 시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치려 애썼고, 이런 시장주의적 정책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 늘 역부족이었다.

예를 들어, 노태우 정부 이후 정부마다 공공주택 수십만 호를 공급해 왔지만, 현재 장기공공주택은 1백만 호로 전체 주택의 5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공공주택 대부분이 분양 전환 주택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공기업 부채 감축을 내세워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축소했고, 보금자리주택도 ‘뉴스테이’(민간임대주택) 등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임대 시장을 키우는 데만 열중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본질적으로 시장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



미봉책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하다

다. 예를 들어,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임대사업 양성화 방안이 포함돼 있고, 또 다른 투기를 부추길 ‘도시재생뉴딜’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부동산 시장을 좀 더 규제하는 전월세 상한제, 부동산 보유세 인상,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분양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은 대책에서 제

외됐다.

시장의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 한 노동자·민중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없다. 부동산이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상품으로 남아 있는 한 이를 이용해 한몫 잡으려는 투기를 조장하는 동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당면한 부동산 투기와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해

야 한다. 즉,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독일과 영국,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급증한 노동자들의 불만과 투쟁을 무마하려고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했고, 1950~60년대 호황기에는 주택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경제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복지 감축 정책 속에서 이

런 성취들도 공격받았다. 예를 들어 1980년에 공공임대주택이 32퍼센트에 이르렀던 영국은 2000년에 그 비율이 22퍼센트까지 떨어졌다. 복지 국가로 널리 알려진 스웨덴에서도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 많은 지방정부들이 공공 주거정책을 포기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와 산업 구조 조정 그리고 이에 따른 복지 삭감 등으로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길거리로 내몬다. 그래서 “그야말로 더러운 돼지우리 같은 집도 언제나 빌리려는 사람이 나타나며, 끝으로 주택 소유자가 자본가로서 자기 소유의 주택에서 최고의 집세를 무자비하게 짜낼 권리뿐 아니라 또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회가 존속하는 한 주택난을 겪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윤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와 노동자 착취를 없애지 않는 한 주택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주택난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오직 하나의 수단이 있을 뿐이다. 지배계급에 의한 노동계급의 착취와 억압을 전반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지금 대도시에는 합리적으로 이용할 경우 현실의 ‘주택난’을 모두 즉각 시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주택용 건물이 있다. 그런 일은 물론 오늘날의 소유자들로부터의 물수를 통해서만, 즉 숙소가 없는 사람들이나 이제까지의 주택에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노동자들에게 그 주택을 제공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공공 복지 조처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정치 권력을 전취하자마자, 마치 오늘날의 국가에 의한 다른 물수와 수용이 그렇듯이 쉽게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엥겔스, 《주택 문제에 대하여》)

강동훈

교사 선발 규모 축소 계획 비판

교육의 질 향상 위해 교원 정원 대폭 늘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고 올해 교사 3천 명을 추가 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초등학교 6천3백 명, 중·고교 교사 6천6백 명 등 총 1만 5천9백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다. 이 발표로 청년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었다.

그러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2018년 교사 선발 수를 대폭 축소해 예비교사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8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은 3천3백21명이다. 이는 지난해에 견줘 2천2백28명(40.2퍼센트)이나 감축한 것이다. 서울은 지난해 8백46명에서

올해 1백5명으로 8분의 1로 줄었고, 가장 많이 임용하는 경기도도 절반가량 줄었다.

중등학교사도 3천33명을 선발하겠다고 해, 지난해보다 4백92명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사는 서울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부의 교사 정원 감축 및 신규 임용대기자의 미발령으로 선발 인원이 전년보다 대폭 줄어들었다”고 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맞다. 2022년이 되면 고등학생 수가 2015년에 견줘 30퍼센트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도 학급 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한참 많다. 중등의 경우

OECD 평균이 23.1명인데, 우리 나라는 31.6명이나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학생이 감소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사를 늘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령인구 감소는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2022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교원을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교사 수천 명이 미발령 상태에 있는 것도 정부가 교원 정원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2014~16년 임용 대기중인 교

사는 전체 선발 인원 3만 2천2백5명 가운데 4천3백33명(13.5퍼센트)이나 됐다.

비늘구멍

박근혜 정부는 교원의 법정정원 기준을 폐기했을 뿐 아니라, 교원 정원을 학급 수가 아닌 학생 수에 따라 배정해 교사 수가 더욱 줄었다. 더불어 정규직 교사를 축소하고 그 자리를 기간제로 대체해 교원 법정 정원 확보율은 7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강사·교사의 정규직화 때문에 교사 신규 임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

부는 최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기간제 교사나 학교 비정규직 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동시에 신규 교원 임용도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임용 축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규 교원 축소는 예비교사와 비정규직 강사·교사 모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임용 시험 경쟁은 비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될 정도로 치열한 상황이다. 교육대를 졸업해도 초등학교사가 되기 위해 재수·삼수까지 해야 한다. 중등의 경우 임용시험 경쟁률은 10.73 대 1이다. 기간제 교사는 4만 6천 명에 이를 정도로 대폭 증가해 학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최소 비용’ 방침에 따른 처우 개선 미흡, 대상 축소

박설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20일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9월에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 규모와 정책 대상, 소요 예산 등을 책정하기 위한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노사협의를 통한 추진”을 약속한 만큼 해당 부문 노조들도 대체로 기대를 갖고 뛰어드는 모양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적잖은 반발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규직화에서 제외된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들이 항의에 나섰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연내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자화사가 아니라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계약해지도 잇따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화’ 정책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줄 이은 해고 사태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가이드라인은 노동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물론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을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나아진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너무 피조작한 수준이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비정규직 제로시대?

우선,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이 무색하게도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아니다. 가이드라인에 이름 붙여진 ‘정규직 전환’이라는 말과 달리, 무기계약직화나 자회사 고용처럼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비정규직’으

로 전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내놓았다는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도 보장되었는 수준이다. 무기계약직이라는 표현이 어감이 좋지 않으니 “공무직”, “상담직” 등으로 명칭을 바꾸기, 복리 후생에서의 일부 차별을 시정하기 등.

둘째, 정부는 무기계약직화 대상조차 예외를 뒤서, 학교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나 강사들,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고용된 비정규직을 제외해 버렸다. 기간제 교사가 4만 7천여 명으로 전체 교원의 10퍼센트나 된다는 점을 볼 때, 예외 대상자들의 규모는 결코 작지 않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도 수천 명에 이른다. (이들이 즉각 반발하자,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 위원회’에서 기간제 교사들과 강사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지 심의하겠다고 했다.)

게다가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를 31만 명(정규직의 16.9퍼센트)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기존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과 수많은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빠진 수치다.

무엇보다 예외 규정은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교총과 우파 학부모 단체가 학교비정규직 교·강사의 정규직화에 반대한다고 날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비판을 제기해야 할 전교조 집행부가 교원 임용 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면 비정규직 교·강사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전교조 활동가들은 과거에 그 자신들도 반대했던 임용고시를 물신화해서 안 된다. 임용고시 합격증이 계급의 단결보다 우선할 수 없다. 비정규직 교·강사의 정규직화는 교육의 공공성과 결코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단결을 추구해 나갈 때, 교육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을 지키고 경쟁 심화 정



집단 해고 위기에 처한 영어회화전문강사 문재인 식 ‘정규직화’는 노동자들의 염원에 턱없이 모자란다

책에 맞서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가이드라인은 “정규직의 연대와 협조”를 촉구한다는 점에서도 고약하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연대”는 정규직 노동자들도 임금·조건을 양보하라는 뜻이다. 정부는 민주노총 등의 반발을 의식해 초안에 들어간 “양보”를 “연대”로 표현만 바꿨을 뿐이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할 정부와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려고 엉뚱한 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정부는 부자·기업주들을 향해서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정책이) 과도한 비용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양보를 압박했다. 정부가 최근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제기하고 나선 것, 금융·공공·보건노조 지도자들의 연대기금 제안을 환영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독일 ‘유연안전성’ 모델의 실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유연안전성’ 모델과 맞닿아 있다. 즉, 고용을 보장하되 임금·노동조건은 유연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유연안전성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독일 일을 보면, 그것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만 낳았다. 임금체계 개악과 임금 양보 등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크게 낮아졌고, 비정규직이 줄기는커녕 크게 늘어났다. 예컨대, 2004년에 파견법이 개악된 이후 한동안 파견 노동자 규모는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이것이 한국 지배자들에게 어쩌나 매력적이었던지,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를 다루는 재판에서 사측은 바로 그 사례를 들먹이며 ‘한국도 합법 파견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책이 관철될 수 있었던 것은

독일 사민당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적극 수용하고, 노조 지도자들이 그 사민당 정부와의 사회적 합의에 매달려 노동자들도 고통을 감수하자’면서 거듭 타협한 결과다. 그리고 이런 타협은 노동조합의 투쟁 기능을 약화시켰다. 노조 지도자들이 임금 삭감을 수용하고 비정규직 확대에 문을 열어 주면서 노동자들 사이에서 회의감이 커진 것이다. 지난 십수 년간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노조 조직률이 빠르게 하락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자들끼리 나눔을 추구하기보다,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투쟁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노동운동은 문재인 비정규직 정책의 악점을 폭로하며 아래로부터 투쟁 건설에 강조점을 뒀야 한다.

교 안의 차별이 더욱 공고해졌다. 이는 정규직 교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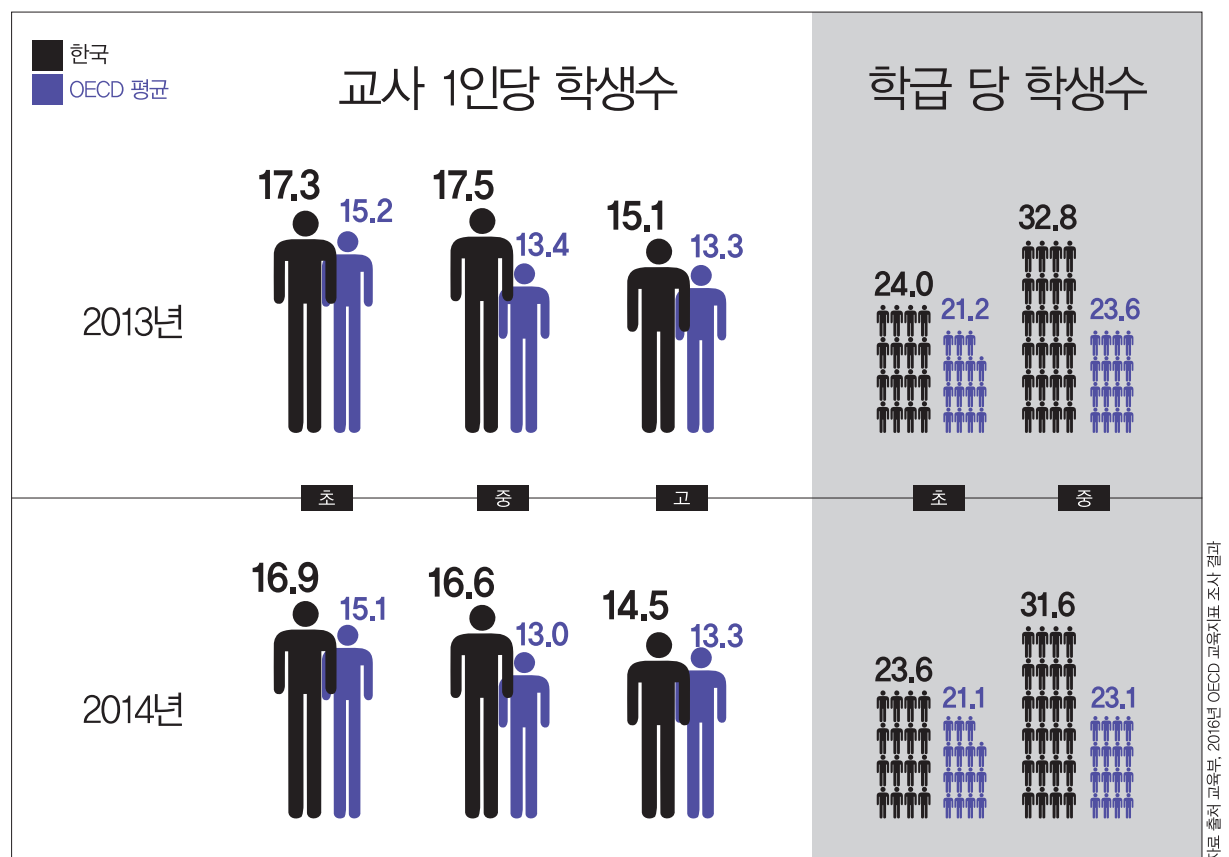
비정규직 교사들과 임용 축소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 모두 정규직 교사를 늘리지 않는 정부 정책의 피해자다. 학교 비정규직과 예비 교사를 대립시키는 이간질에 맞서, 교사를 대폭 확충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 2016년 정부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0퍼센트로 OECD 평균 4.5퍼센트보다 낮고,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1.9퍼센트로 OECD 평균 0.7퍼센트보다 높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군비 증강을 강조한다. 이미 선거 때 GDP 대비 2.4퍼센트 수준인 국방예산을 2.7~2.8퍼센트로 늘리

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군비 증가가 아니라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교육대·사범대 학생들을 비롯한 예비 교사들은 임용 확대를 요구하는 행동에 즉각 나서고 있다. 교원임용시험 준비생들과 서울교대 학생 등 1천여 명은 서울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선발 인원 축소를 규탄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기자회견을 하고 8월 11일(금) 2시 서울역에서 초등교사 선발정원 축소를 규탄하는 전국 집중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중등에 비교사 모임 소속 회원들도 임용 인원 확대를 요구하며 8월 12일(토) 4시에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다.

김현옥 전교조 교사



왜 문재인은 취임 석 달 만에 성주행 사드 차량 “운전석”에 앉았을까?

김영익

이 글은 8월 6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개정한 것이다.

북한이 잇달아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발사하자, 이를 둘러싼 대립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을 향해 “분노와 화염에 직면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적의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트럼프 정부가 밀어붙이는 대북 제재 강화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 제재를 강화할 때라면서 말이다.

〈한겨레〉나 〈경향신문〉 등의 중도진보 언론도 ‘문재인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대화에 합의했는데, 북한이 도발로 답했다’고 비난했다.

물론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북한 핵과 미사일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노동계급의 반제국주의 운동 건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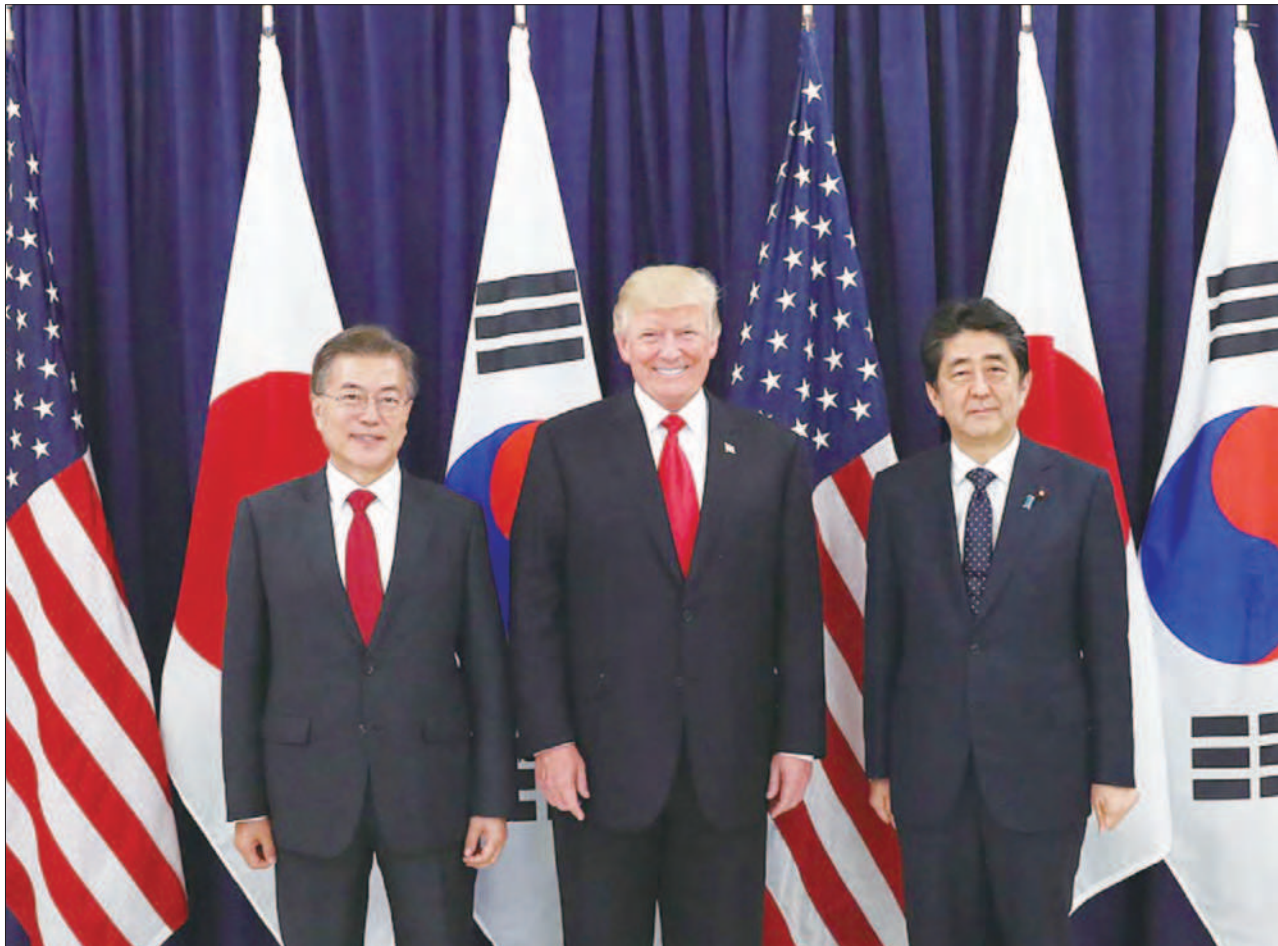
그런데 북한이 느닷없는 도발로 문재인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보는 게 맞을까?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는 대화 제안이 언급되지만, 그 앞에 “올바른 여건 하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트럼프와 문재인은 기존 대북 제재 외에도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제재 강화를 예고했다.

트럼프와 문재인은 또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서 “한·미·일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3자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킬 체인 등 기존의 대북 선제공격 전략을 유지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처럼 제국주의적 대북 제재와 군사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면서 대화를 제의하니, 북한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

지난 4월 트럼프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한반도 인근에 항모전단을 추가 배치한 바 있다.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 주변 수역으로 들어온 바로 그날 사드도 성주에 들어갔다. 트럼프가 4월 내내 북한 ‘도발’을 억제한답시고 한반도 긴장을 높였는데, 결국 그 분위기를 이용해 중국을 겨냥한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중국이 최초의 자체 제작 항공모함의 진수식을 열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항모와 중국의 항모가 대치하는 사이에 사드가 남한에 배치된 것이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경쟁과 갈등이 바로 오늘날 동아시아와 한반도 불안정의 핵심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이런 맥락 속에서 위치 짓지 않으면 사안의 진정한 본질을 놓치게 된다.



평화 염원 대중의 기대를 배신한 문재인 7월 6일 독일 함부르크 한·미·일 정상회담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 미사일 문제, 인권 문제 등을 트집 잡아 북한을 압박했다. 냉전 해체라는 유동적 상황 속에서, 북한이라는 ‘악마’로부터 세계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경쟁국들을 견제하고 패권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다.

1998년 미국은 북한이 “5년 안에”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북 압박을 정당화했다. 물경 1998년에 말이다! 그리고 이를 명분으로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을 합리화했다. 미국의 이런 주장은 그 뒤에도 계속 등장했다. 이런 점에서 현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된 셈이다.

제국주의

오늘날 동아시아와 한반도 불안정의 근원에는 제국주의가 있다. 제국주의를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협소하고 일면적인 이해다. 제국주의는 주요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서로 경쟁하는 체제다. 그리고 경쟁과 대결을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 제국주의 체제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동아시아다(중동도 핵심적인 제국주의 단층선이다).

오랫동안 미국은 세계 최강 패권 국가이자, 동아시아에서도 패권을 쥐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적 주도력은 갈수록 도전받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여전히 세계 1위 경제이지만)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게다가 2008년 세계경제 위기의 진앙지가 바로 미국이었다.

그 사이에 중국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최대 규모의 산업국이자 수

출국으로 거듭났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일본의 차관을 받던 중국은 이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또한 세계 최대 달러 자산 보유국이자, 세계 2위의 대외투자국가다.

중국의 경제력 신장은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증대로 이어졌다. 중국 지배자들은 중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주요 해상 운송로를 미국이 장악한 데 불만을 갖고, 유사시 미군 전력을 역내에서 밀어내고자 한다.

오바마 정부 때부터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경제적·지정학적 영향력을 재천명하고자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국제서열의 맨 꼭대기를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전진배치하며 중국을 견제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긴장을 높이며 불안정을 증대시켜 왔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다소 복잡하다. 우선,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경제력 격차는 여전히 상당하다. 중국이 당장 미국의 세계적 지위에 도전할 위치가 못 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경제들은 미국에 많은 상품을 수출한다. 그 대가로 동아시아 경제들은 미국의 달러 자산을 구입했다. 즉, 미국의 소비 능력은 상당 부분 동아시아 경제에서 비롯한다.

이런 미·중 간 경제 순환 구조가 2000년대 세계경제를 이끌어 간 핵심 동력이었다. 세계경제 성장을 이끈 이런 상호의존 구조를 보며,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파국적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봤다.

그러나 이 상호의존 구조는 불안정

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예컨대 경제 위기가 이 상호의존을 따라 상호 침투하면서 불안정을 키울 위험성이 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미국의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여전히 부진하다고 지적한다. 기업 투자도 근본에서 회복되지 않고 있다. 중국 경제도 점점 불안정의 진원지가 돼 가고 있다.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중국 정부가 은행들을 독려해 대대적으로 돈을 풀었던 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시멘트, 철강 등의 과잉생산도 문제다.

장기화하는 경제 불황 속에서 각국은 서로 다른 형태의 문제에 대응해 상이한 전략을 펼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높은 국가들 간의 협력적 경제 운용을 어렵게 만들고,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경제 위기에 직면한 유럽연합의 취약한 대응도 본질적으로 유럽연합이 국민국가들 간 연합이라는 한계에서 비롯한다.)

트럼프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등장했다. 미국 제국주의가 경제적·지정학적 도전과 역풍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트럼프는 기존의 전략을 수정하자고 주장한다. 70년 넘게 미국 패권의 근간이 돼 온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국제 질서를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국제화한 생산 사슬을 미국으로 되돌리겠다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미국 경제에 대한 나름의 처방전이다. 그러나 이는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갈등을 키울 요소가 되고 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침병이었던 미국이 ‘보호무역’ 카드를 치켜든 때

에, 묘하게도 중국 시진핑은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한다. 그것도 다 보스 포럼에서 말이다.

트럼프 정부가 G7이나 G20 회담에서 ‘보호무역’을 역설하는 동안, 시진핑 정부는 ‘일대일로 포럼’을 대대적으로 열어 20개국 정상을 비롯해 1백 개국 이상의 정부 인사들을 초청했다. ‘일대일로’는 유라시아를 중국 중심의 인프라로 연결하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개발 프로젝트다. 투자 계획만 놓고 보면, 과거 마셜플랜에 필적할 만하다. 이 계획은 중국 경제의 위기를 해소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유라시아의 주요 국가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중국 쪽으로 좀 더 끌어당기겠다는 구상이기도 하다.

또한 자본과 투자의 지리적 확장은 군사력 투자 범위의 확장도 수반한다. 최근 중국은 아시아에서 중동에 이르는 주요 해상 교통로에서 군함 기항지를 확보하려 애쓰고, 아프리카 지부티(중동과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처음으로 해외 군사기지를 지었다.

그래서 이미 2015년에 〈파이낸셜 타임스〉가 중국의 이런 경향을 두고 이렇게 비꼬았다. “제국주의를 이끄는 것이 자본가들의 초과 이윤이라는 레닌의 이론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외견상) 레닌주의 국가(중국)에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이처럼 주요 강대국들은 장기 경제 침체에서 탈출하지 못한 채 상이한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패권 국가 미국의 상대적 지위 하락과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정세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제국주의 간 갈등과 경쟁을 악화하는 요인이 된다.

제국주의 간 경쟁 강화는 핵무기 경쟁을 포함한 군국주의 강화를 수반한다. 트럼프가 올해 내놓은 국방예산안의 증액분만 해도 한국 국방비보다, 북한 GDP보다도 훨씬 더 많다.

군비 증강은 단지 미국과 중국만의 일이 아니다. 러시아·일본 같은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도 이 경쟁과 갈등 구조에 얽혀 있으며,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쟁에 자극받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적으로 군비 증강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경쟁은 과거 냉전기의 양극화 양상보다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 때문에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쟁이 장차 제국주의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선부르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정치적 내연 상태인 것만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

그런 가운데 문재인이 집권했다.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 중에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이 만든 외교·안보 적 패들(사드,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협

플랜트건설 노동자

정부는 건설 현장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정 등)을 해결해 주리라 기대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은 빠르게 그 기대를 배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을 위시한 제국주의 간 갈등이 높아지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자, 미국과의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우선 사드 문제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사라지고, 사드 배치를 굳히고 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6월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정신에 입각한 합의를 번복할 의도가 없다”며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 사드 배치 정당성 확보라고 밝혔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환경영향평가와 무관하게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온전한 사드 포대가 곧 성주에서 가동될 상황이다.

문재인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에도 적극 협력한다. 7월 6일 한·미·일 정상회담(독일 함부르크)에서 트럼프·문재인·아베는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모든 국가들이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압박에 문재인이 동의해 준 것이다.

문재인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주도할 “운전석”에 앉았으나, 실상 미국이라는 견인차에 끌려 가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의 ‘대화와 제재의 병행’ 노선은 이미 모순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자주 국방”을 내세워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추진하려 한다. 임기 내로 GDP 대비 2.4퍼센트 수준의 국방비를 2.9퍼센트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어이없게도 “압도적 국방력으로 대북 대화”를 이끌어내겠다고면서 말이다.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엔 핵잠수함 건조와 탄도미사일 중량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앞으로 매년 10퍼센트가량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2.8퍼센트 남짓이다. 결국 다른 데 쓰일 돈을 빼내야만 국방비를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필요를 희생해서 국방비를 증액할 공산이 크다. 국방비 증액에 쓸 돈이라면, 교육대생들에게 충분한 정규직 교사 자리를 다 주고 비정규 교사는 물론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런 자주 국방조차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계속 동맹국의 “책임 분담”을 강조해 왔다. 동맹국들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협조하면서 현지 문제 대처에서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라고 촉구해 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부응하는 셈이다. 게다가 앞으로 한·미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자고 했으므로, 미국의 비싼 첨단 무기

들을 엄청 수입할 것이다. 이는 문재인이 최근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언급했다. “우리는 국방비 지출을 늘려 갈 계획이고 내년에 특히 그럴 계획이 있다. 국방비 상당 부분이 미국 첨단 무기 구입에 쓰일 터여서 대한 무역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자신이 동아시아 불안정에 한몫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친제국주의적 선택을 반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을 폭로하고 친제국주의·군국주의적 정책을 펼치는 것에 도전해야 한다.

저항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의 불안정성은 제국주의에서 비롯한다. 그리고 갈등의 근저에는 자본주의의 심각한 ‘구조적 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체제 내의 조율과 타협으로 현재의 제국주의 갈등 구조가 쉽사리 해소되기는 힘들 것이다.

북핵 문제 하나만 놓고 봐도 그렇다. 미국 지배자들은 북핵 문제를 항상 그 자체로 보지 않고 경쟁 제국주의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판단해 왔다.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도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예컨대 최근 미국은 북핵 문제에서 중국 역할(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에게 대북 제재를 제대로 하라고 촉구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그동안 자신이 북한의 핵 능력 발전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희석시킬 수 있다. 또한 중국 책임을 상기시키며 한국 등을 미국의 동맹 체제 속에 더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에 하나 트럼프와 김정은이 햄버거를 먹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더라도, 제국주의 갈등이 온존하는 한 항구적 평화나 안정적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불안정에 맞설 진정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 대안은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 지배자들에게서도, 핵무기를 만드는 북한 지배자들에게서도 찾을 수 없다.

오늘날 동아시아에는 위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항도 존재한다. 얼마 전 한국 민중은 대중 시위로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다. 중국에서는 노동자 저항이 지난해 두 배로 증가했고, 최근 경제가 많이 성장한 동남아시아에서도 노동자 저항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동아시아에서는 위기 속에 저항의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이윤 체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회 세력인 노동계급의 저항이 커지도록 고무하면서, 이것이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적 운동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향후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 그리고 그곳에 발 딛고 살고 있는 우리의 운명이 거기에 달렸다.

전국의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이 8월 10일 하루 일손을 놓고 서울 광화문에 모여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불법다단계하도급 척결, 퇴직공제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폐지, 초단기근로계약 반복 갱신 금지, 부당노동행위 척결, 노조할 권리 보장, 산별교섭, 원청 건설사와 교섭권 보장 등이다.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은 정유, 석유화학, 발전소 등 대규모 산업 설비를 건설·유지·보수하는 일을 한다. ‘평생 비정규직’으로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은 이번 상경투쟁을 통해 ‘일할 만한 일자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법·제도로 보장받기를 원한다.

토목건축 건설 현장과 마찬가지로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의 일터에도 다단계 하도급과 포괄임금제가 만연해 있다. 이로 말미암은 높은 산재 위험과 임금 갈취, 장시간 중노동의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원청 건설사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여러 단계로 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사를 수주받은 하도급업자는 이윤을 늘리기 위해 공사기일을 단축시키려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채근한다.

광양의 한 플랜트건설 노동자에게 현실을 들었다.

“5명이 이틀간 해야 하는 공사를 야근해서 하루 만에 끝내면 하도급업자는 이틀치 공사비를 받고도 우리한테는 하루 일당에 야근비만 조금 더 주고 나머지 차액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 고혈을 더 짜낼수록 하도급업자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구조죠.”

포괄임금제는 하도급업의 노동자들에게 고혈을 짜내는 수법이다. 임금에 이미 ‘추가수당’을 반영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주들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중노동을 마음대로 강요한다.

“이쪽 광양, 여수 현장에서는 그동안 투쟁으로 오전 10시 30분, 오후 3시 30분 휴식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포괄임금제를 받는 팀들은 이런 휴식 시간도 없이 종일 땀세게 일할 때가 비일비재해요.”

이런 혹사 속에 누적되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는 노동자들이 안전을 챙기기 어렵게 만든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0여 년간 제조업의 제조원가에서 수선비(건물, 설비의 내용연수에 따라 적절한 손질로 수명을 연장시키는 수리 비용)의 비중은 감소 추세다. 이 때문에 플랜트건설 현장을 포함한



문재인은 플랜트건설 노동자의 요구 외면 말라

건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은 오히려 높아졌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1천대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3천8백37명으로 전년 대비 3백69명(10.6퍼센트)이 증가했다. 재해율도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추세다.

초단기 계약

한 달 단위의 초단기근로계약 같은 불안정한 고용 조건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기 어렵게 하는 구실을 한다. 또, 근로기준법상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 해고예고수당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3개월, 6개월짜리 공사에 일자리를 구해도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해요. 노조가 없거나 약해서 매달 계약 갱신을 할 때마다 업체 눈치를 보게 되면, 뺄세고 위험해서 불안이 있어도 말하기가 꺼려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평생 현장에서 몸을 혹사하다가 나이가 들거나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최소한의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게 도입된 퇴직공제부금도 현실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사용자가 납부하는 퇴직공제부금은 10년째 하루 4천 원으로 동결돼 있어 건설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부금은 1년에 고작 77만 8천 원이다. 이는 제조업 노동자 1년 퇴직금(2백81만 9천 원)의 27.6퍼센트에 불과하다.

심지어 현행법상 민간 공사의 경우 공사 예정 금액이 1백억 원 이상이어야 퇴직공제제도가 적용된다. 그래서 편법이 만연하다. “지금 현대제철이 발주한 공사에 나가는데, 전체 공사비는 1백억 원이 넘지만, 공사를 여러 과정으로 쪼개 공사비 규모를 줄이는 편법을 써서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되

지 않아요.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빼 빠지게 부려 먹으면서 노후생계비로 고작 하루 4천 원 적립하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거죠.”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은 이미 노동자들이 수년 동안 개선을 요구해 온 것들이다.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은 2008년부터 법으로 금지됐고, 얼마 전 발표된 정부 ‘1백대 국정과제’에 포괄임금제 규제가 포함돼 있다. 퇴직공제부금도 고용노동부가 이미 2014년부터 5천 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런 요구들을 쟁취하기 위한 플랜트건설노조의 상경투쟁은 정당하다.

최근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의 사기는 나쁘지 않다. 울산, 충남 대산에서는 몇 년 만에 임금 인상을 쟁취했고, 여수에서도 임금 인상을 얻어 냈다.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정유업체들이 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비교적 쉽게 양보를 했다. 포항, 전남동부경남서부(광양), 강원 등에서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이 진행 중이다. 특히 충남 대산 지역 조합원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1차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키며 파업을 지속해 지부 지도부가 추가협상으로 더 많은 양보를 받아오도록 하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번 상경 투쟁이 이런 분위기를 이어받아 정부에 법·제도 개선을 압박하고, 현장에서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의 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장우성

Q 용어설명

포괄임금제?

임금에 이미 ‘추가수당’을 반영하여 두고 그 이상의 추가적인 야근 등에 대해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근로계약을 하는 형태

낙태, 낙태죄 그리고 여성의 몸

이현주

지난 한 해 동안 낙태는 세계적으로 큰 이슈였다. 지난해 가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3만 명 이상이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시위를 했다. 폴란드에서는 우익 정부가 이미 대부분 금지된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려고 하자 여성 10만 명이 시위를 벌였고, 결국 정부의 반동적인 시도를 좌절시켰다. 미국에서도 공공연히 낙태권을 축소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취임에 맞춰 전국에서 1백만 명 이상이 시위를 했다. 한국에서도 보건복지부가 낙태 처벌을 강화하려 하자 여성들 수백 명이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도심을 행진했다.

세계 곳곳의 이런 저항 움직임은 여성 차별 반대 운동과 논의가 활발해지는 상황과 맥을 같이한다. 오늘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고 평등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여전히 여성의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현실이 존재한다. 특히 새 세대 여성들은 정부의 낙태 처벌 강화 움직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다.

낙태는 여성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낙태는 여성이 자신의 몸과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다. 국제적 구호인 “내 몸, 내 선택”(My body, My choice)는 아주 단순 명쾌한 구호다. 즉, 낙태를 할지 말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여성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에게 낙태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면, 여성은 출산을 통제할 수 없고, 자신의 인생도 계획할 수 없다. 따라서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낙태할 권리는 여성해방에 핵심적인 요구다.

불법 하에서 낙태

지난해 거대한 정권 퇴진 운동의 여파로 정부의 처벌 강화 시도는 좌절됐지만, 한국에서 낙태는 대부분의 경우에 여전히 불법이다. 모자보건법상 낙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등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때조차 임신 24주 이내에만 허용되고, 반드시 배우자 남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05년에 보건복지부가 추정한 한국의 연간 낙태 시술 건수는 34만 건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혼 여성 세 명 중 한 명이 낙태 경험이 있다. 그중 대부분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낙태다.

낙태가 불법인 상황에서 여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낙태 사실을 숨기고 괜한 죄책감에 시달린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비싼 병원비를 감당해야 한다. 낙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고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낙태 단속을 강화하기 전에도 낙태 시술 비용은 평균 30만 원가량이었다. 임신한 10대 청소년이 시술 비용을 마련하려고 성매매를 했다는 경찰 보고도 있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낙태 단속을 강화하면서 사정이 더 나빠졌다. 낙태



낙태죄를 폐지하고 낙태를 전면 합법화하라

시술을 거절하는 병원이 늘었고 비용이 수백만 원으로 치솟았다. 부유한 여성들에게야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월급이 2백만 원도 안 되는 대다수 여성 노동자와 10대 여성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여성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낙태약을 판매하는 사기꾼들도 생겨났다.

2012년에는 18세 여성이 낙태 수술 중에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일도 있었다. 이 학생은 임신 6개월이 된 상태에서 위험한 수술을 받다가 목숨을 잃었다. 병원은 이 여성의 비참한 상황을 이용해 6백50만 원이나 뜯어냈다. 초기에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전 세계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좀 더

처참하다. 2012년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를 보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낙태의 절반가량인 2천2백만 건이 ‘안전하지 않은 낙태’이다. 그리고 그 결과 연간 4만 7천 명이 사망하고 8백50만 명이 합병증을 얻는다. 그중 다수가 낙태가 불법인 라틴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아시아의 나라들에서 벌어진다.

낙태가 불법인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이런 끔찍한 현실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 준다. 법이 낙태를 범죄로 취급할 때조차, 여성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출산을 통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출산이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금지와 규제는 낙태를 멈추지 못하고, 오히려 여성들을 심각한 위험과 고통으로 내몰 뿐이다.

낙태 전면 합법화

낙태죄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 지난해 정부의 처벌 강화 시도가 좌절됐지만, 낙태죄가 존재하는 한 이런 시도는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또한 단지 처벌받지 않는 데서 그쳐선 안 되고 여성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낙태가 합법화돼야 한다. 즉, 첫째, 여성이 원할 때 조건 없이 낙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건강보험이 적용돼 돈 걱정 없이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여성 노동자들은 낙태 시술 뒤 충분한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여성 혼자서도 쉽게 낙태할 수 있는 낙태약(미프진)을 도입해야 한다.

“조건 없이”가 뜻하는 바는 사유나 기간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정의당은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 허용’을 주장한다(20대 총선 당시). 물론 이것만 허용해도 현재 이뤄지는 낙태의 많은 부분을 포괄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저러하게 조건을 다는 것은 언제나 그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문제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낙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여성이 아니라 조건을 심의하는 의사나 국가기구 같은 제3자가 갖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에서도 의사 2명이 승인한 뒤에야 낙태가 허용된다.

낙태 허용 기간도 쟁점이다. 물론 한국에서 낙태의 96퍼센트 이상이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진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후기 낙태도 방어해야 한다. 오랫동안 임신 상태를 유지해 왔음에도 더는 임신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그 여성에게 그럴만한 절박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후기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위급한 여성들을 위험한 낙태로 몰고가는 것일 뿐이다.

상담이나 숙려 기간 의무화 등의 조건도 없어야 한다. 물론 낙태 과정이나 낙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 필요한 경우 피임법 같은 정보들은 기본으로 제공돼야 한다. 그러나 가령 독일에서 낙태 전 의무적 상담은, “임신의 지속을 위하여 부녀를 격려하고”, “태아가 생명에 대한 독자적 권리를 가지는 것[을] … 부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여성들은 낙태 시술을 받으려면 적어도 24시간 전에 초음파 검사를 받아 태아의 모습과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는지를 의사한테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제도는 여성들에게 괜한 죄책감을 심어 주고 낙태 시술 문턱을 높이므로 반대해야 한다.

남성 파트너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는 제한도 없어야 한다. 파트너 동의를 의무화하면 여성이 남성의 동의를 얻지 못해 원치 않는 출산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요컨대, 낙태 선택은 의사도 국가도 파트너도 아닌 온전히 여성 자신의 몫이어야 한다. 여성의 요청만으로 합법적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낙태 불법화는 언제나 노동계급과 가난한 여성들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여성의 몸은 인큐베이터가 아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낙태가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생명 존중’ 주장은 그 자체로 위선이다. 사실 낙태 금지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친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낙태 반대 진영에는 전쟁을 지지하고 이주인 추방에 혈안이 된 호전적이고 무자비한 자들이 많다.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가 대표적이다. 유럽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낙태 반대론자들은 나치들이다.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 반대하고 세월호 참사와 진실 은폐에 책임이 있는 우익 정부가 ‘생명권’ 운운했던 것도 역겹다.

물론 낙태는 인간이 될 잠재력이 있는 세포 덩어리를 제거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살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비약이다.

배아나 태아는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생명체이긴 하지만, 인간은 아니다. 만약 “가능성”만으로 인간이라고 한다면, 피임과 자위도 해선 안 되고 성 관계는 오로지 출산을 위해서만 해야 한다는 논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심지어 강간을 당해 임신해도 낙태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듯 ‘생명권’ 주장을 강변하면 매우 반동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무엇보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여성의 몸에 철저히 의존해 있는 태아의 “권리”가 이미 독립적 인격체인 여성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사실 세포 덩어리와 한 인간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을 하찮게 취급하는 것이다. 여기서 세포 덩어리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여성을 단지 출산 도구로 취급하는 것일 뿐이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낙태 금지가 마치 성경 말씀인 양 이야기한다. 그러나 교회가 낙태를 언제나 금지한 것은 아니다. 또한 언제나 “살인”이라는 이유로 금지한 것도 아니다.(이에 대해서는 본지 216호에 실린 ‘낙태의 역사 — 원시 사회에서 자본주의까지’를 참고하시오.)

지난해 11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사제에게 낙태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가톨릭 교회는 원래 이 권한을 주교들이나 소수의 고위 성직자들에게 한정해 왔었는데, 모든 사제에게 이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당시 교황은 여전히 낙태를 “죄악”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 발표는 가톨릭 내부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자의식 상승에 조응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내부의 긴장과 변화가 있다는 사실은 낙태가 교리나 ‘생명’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임을 보여 준다.

경제 위기와 가족제도

한국 정부는 1960년대부터 오랫동안 산아 제한 정책을 폈다. 그러다 1980년대부터 출산율이 하락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묵인해 오던 낙태를 단속하려 했다. 한국 자본가들

과 국가는 미래의 노동력 부족을 크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 사정과 열악한 사회 복지 때문에 결혼조차 미루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에는 눈 감으면서 말이다. 사실 이 사회에는 낳지 않을 권리가 제약받지만, 동시에 아이를 낳을 조건도 제한돼 있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주거 문제 등등을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지 말지, 언제 몇 명을 낳을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 돈은 아까워한다. 그러면서 여성과 노동계급 가정에 희생을 강요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예나 지금이나 여성의 몸을 자본주의 축적 논리에 종속시키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부인한다.

정부의 낙태 단속·처벌 강화 시도는 오늘날 이혼, 독신, 혼외 출산 증가 등으로 ‘정통’ 가족제도가 약화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에서 지배자들은 미래의 노동력인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과 노인 부양, 간병 같은 일들을 개별 가정, 그중에서도 여성에게 떠넘긴다. 자본주의에서 여성 차별의 물질적 기초가 여기에 있다. 자본주의에서 가족제도가 하는 구실 때문에 지배자들은 계속해서 가족제도를 보호하려고 한다. 보수적 성 관념과 여성관을 유포해 노동계급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배자들에게 가족제도는 유용하다.

특히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시기에 가족제도가 하는 경제적·이데올로기적 구실은 지배자들에게 더욱 절실하다. 경제 위기 시기에 지배자들은 알량한 복지조차 줄이고, 실업, 임금 삭감, 일자리 불안정 등 대중에게 고통을 전가한다. 이때 가족제도가 고통받는 대중의 경제적·심리적 안전판 구실을 하는 게 지배자들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한편에선 여성들더러 더 많이 노동시장에 나와서 착취당하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가정에서의 아내와 어머니로서 구실을 다하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출산이 여성의 임무인 양 부추겨지고, 낙태 단속도 벌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낙태 공격은 단지 여성의 삶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노동계급을 옥죄려는 시도의 일부다. 낙태 공격에 맞서서 노동계급이 투쟁해야 하는 이유이다.

추천 소책자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

정진희, 최미진 지음 | 노동자연대
52쪽 | 3,000원



지난해 폴란드 검은 시위 대중운동으로 발전하는 데서 좌파 정당과 노동조합의 공식적 지지와 참가 독려가 중요했다

낙태는 노동계급의 문제다

낙태가 노동계급에게 중요한 문제인 이유는 무엇보다 낙태 불법화의 주된 피해자가 노동계급이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부유한 여성들은 낙태가 불법인 상황에서도 안전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부유한 여성들은 비용이 얼마든 별 문제가 되지 않았고, 개별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거나 외국에 나가서 안전한 낙태 시술을 받고 충분히 쉬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지배계급 여성들이 의사에게 낙태 시술을 해 달라고 사정하며 매달리고, 낙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다.

낙태 불법화는 언제나 노동계급 여성과 가난한 여성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낙태죄를 폐지하고 나아가 낙태권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에 노동조합과 노동계급 조직들이 적극 나서는데 중요하다.

여성운동 내 일각에는 낙태를 남 대여의 구도로만 보면서, 피임과 낙태의 문제에서 남성의 무책임성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다. 물론 여성의 피임 요구를 거부하거나 임신·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는 남성들은 문제다.

그러나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이유가 단지 남성의 무책임성과 일방적 강요 때문이 아닌 경우도 많다. 낙태 문제를 남성 일반의 탓으로 돌리는 견해는 남녀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해서 낙태권 쟁취 투쟁에 나서도록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남성 파트너의 무책임성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여성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 만약

낙태권이 보장돼 있다면 무책임한 남성 파트너 때문에 여성의 삶이 망가지는 일도 줄어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낙태권 운동들은 노동조합 조직이 대거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이때 남녀 노동자들은 함께 연대해서 투쟁했다. 낙태권이 보장되지 않아 뒤통목 낙태로 몰리고 삶이 망가질 위기에 처하는 문제는 남성 노동자들의 여성 파트너, 딸, 동료의 문제이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멀리 나아간 경우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이다. 러시아 혁명으로 세워진 노동자 국가는 세계 최초로 여성의 요구에 따른 낙태를 합법화했다. 여성의 요청 말고는 어떠한 낙태 제한 조건도 없었다.

1970년대 영국에서는 보수당 정부가 합법 낙태를 축소하려 하자, 영국노동당이 최대 8만 명 규모의 대중 시위를 이끌어 저지한 경험이 있다. 이 시위는 낙태권 공격을 막아냈을 뿐 아니라 낙태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대중적인 지지가 확립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때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조합들이 낙태권 공격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채택하고 운동에 앞장서도록 촉구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지난해 폴란드의 낙태권 운동이 성공한 데서도 노동조합의 공식적 지지와 참가 독려가 중요했다. 많은 여성 단체들과 함께 좌파 정당 라젠(함께)과 노동조합과 사회주의자들이 동참했다. 전국노동조합동맹과 교사노조가 낙태권 시위 지지를 표방하고 조합원들의 시위 참가를 독려했다.

최근 아일랜드에서 낙태죄 폐지 운

동을 이끈 ‘제8조 폐지 연합’은 65개 단체로 구성돼 있는데, 여성단체들과 시민·건강권 지지자들, 노동조합들과 좌파 단체들이 포함돼 있다.

현재 한국에서 낙태는 매우 뜨거운 쟁점이 돼 있다. 한때 주류 여성 단체들이 ‘처벌 반대’를 중심으로 수세적으로 대응해 왔던 것에 비춰 보면, 최근 낙태죄 폐지를 선포하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화된 것은 일보 진전이다.

그런데 여성들이 겪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낙태 합법화를 분명하게 요구**하고, 낙태를 노동계급 대중의 문제로 보며 **노동계급의 조직적 동참을 추구**하는 전향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은 후보 시절 낙태죄 폐지 요구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정치인들에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자신의 임기 내에는 할 생각이 없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낙태죄를 폐지하고 나아가 낙태를 합법화하는 데서는 문재인 정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행동과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동참이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서 사회주의자들이 주요한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글은 필자가 맑시즘2017에서 한 발표를 축약·정리한 것이다. 이 발표문은 정진희·최미진이 쓴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노동자연대)를 많이 참고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외인사 판정 났지만 가해자 수사·처벌은 감감무소식

6월 15일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뒤늦게 '외인사'로 수정했다. 그동안 경찰과 서울대병원이 민중총궐기 현장을 찍은 영상과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의 목격으로 확인된 경찰의 살인 진압을 2년 가까이 은폐하려 한 시도가 이제야 조금 바로잡힌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별 진척이 없다는 것은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다. 사망 진단서를 조작한 서울대병원 서장석 원장과 백선하 교수 등은 1순위 처벌 대상자들이지만 내부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오히려 뻔뻔하게도 외인사 판정 후에도 서울대병원 측은 “백선하에 대한 징계 검토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쪽에서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유가족도 없는 자리(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사과한 게 전부였다.

이철성은 지난해 11월 광주 경찰이 페이스북에 '민주화의 성지' 글을 게시하자,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면서 “쫓발 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냐”, “내가 있는 한 안 된다”고 말했던 자다. 이외에도 수많은 악행 프로필의 소유자인 이철성의 '사과'는 아무런 진정성이 없다.

이철성은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의 바통을 이어받아 박근혜 정부의 말기를 지켰다. 따라서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 은폐, 책임 회피의 공범이다. 밀양송전탑 시위 폭력 진압의 책임자(경남경찰청장)이기도 했다. 이런 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경찰청장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철성을 해임해야 한다.

한편 박근혜 정부 내내 수사를 여영부영 미뤄 온 검찰은 문재인 정부 하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미루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서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경찰의 내부 진상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한다.

박상기 새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는 “장관이 되면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휘 감독하겠다”고 말했지만 이것도 감감무소식이다.

말뿐인 약속들과 시간 끌기 속에서, 이미 잘못이 뚜렷하게 밝혀진 주요 책임자들조차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책임자 처벌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의 힘 덕분에 등장했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요구가 촛불의 6대 선결 과제 중 하나였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백남기 농민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며 거리로 나왔다는 것을 외면하려는 듯 하다.

아마 문재인 정부는 자본주의 국가의 집권권자 입장에서 경찰 판교 조직을 건드리는데 부담을 느낄 뿐 아니라, 때때로 폭력을 수반할지라도 경찰의 시위 진압은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경찰 폭력에 기대 진압해 왔다. 대테러 진압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폭력 진압한 2000년 롯데호텔 파업(음주 진압 의혹까지 나왔다), 맨몸으로 도로에 누워 있는 노조원들을 경찰이 야차처럼 달려들어 패고 찢고 밟은 2001년 인천 부평 대우차 폭력 진압 사건 등이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 폭력 진압 사건들이다.

노무현 정부도 첫째부터 철도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을 경찰 폭력으로 해산시켰다. 전북 부안에서는 핵폐기장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 시위에 전국의 진압 경찰들을 끌어모아 2만 명이나 보냈다.(당시 부안 인구가 7만여 명이었고, 이런 경찰 동원은 노무현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 2005년에는 농민 집회에서 집회장 안까지 쳐들어온 경찰의 잔인한 폭력으로 농민 두 명이 사망했다. 한 집회에서 두 명이나 때려 죽인 것이다! 2006년에는 포항건설노조 하중근 열사가,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는 건 물론이고 소화기까지 집어던지는 무자비한 폭력 진압으로 결국 사망했다.

이런 정부에서 청와대 실제로 지낸 문재인은 이후 야당 시절에 낸 여러 회고록 등에서 이런 폭력 진압과 사실상의 국가 살인 사건들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 준 바가 없다.

지난해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유가족이 요구한 백남기 농민 특검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새누리당이 다수인 법사위에 넘김으로써 유가족과 운동의 뒤뚱수를 쳤다. 당시 원내대표 우상호는 “어차피 특검 정신은 여야 합의로 하라는 것 … 여야 합의 없이 특검을 하는 전례를 만드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했다. 우파와의 상생이 백남기 농민의 억울함과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경찰이 지금 경찰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인권 경찰로의 개혁” 운운하는 것도 위선적인 ‘쇼’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이익과 질서를 무력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존재 이유인 경찰은 개혁 정도로 그 본질적인 성격을 바꿀 수 없다.

최근에 경찰이 개혁적 제스처를 취하는 건 검경 수사권 조정 움직임에 편승해 독자적인 수사권을 확보해 보려는 책략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당 공식 브리핑에서 “경찰 개혁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한 것은 안이한 발상으로 보인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독립적인 비판과 폭로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망 진단서를 조작했던 서울대병원조차 외인사를 인정한 마당에, 물대포를 쏜 경찰과 그것을 지휘한 경찰 수뇌부가 처벌받는 것은 두말하면 입 아픈 당연한 소리다. 문재인 정부는 시간 끌지 말고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자들을 당장 처벌하라.

김승주

송경동 시인, 미당문학상 후보 거부

서정주는 일본 천황과 남한 독재자를 찬양한 반동적 시인이었다

‘거리의 시인’ 송경동 시인이 미당문학상 후보를 거부했다. 송경동 시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미당문학상이 “친일 부역과 5·18 광주 학살과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그 군부 정권에 부역했던 이를 도리어 기리는 상”이므로 “그 상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와 해방을 위해 싸우다 수없이 죽어가고, 끌려가고, 짓밟힌 무수한 이들의 아픔과 고통 그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다.”

송경동 시인은 기룡전자 투쟁을 비롯해 크고 작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 왔다.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항의해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했다. 그래서 송경동 시인이 후보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앞선 활동의 연장이고 잘한 일이다.

2000년에 죽은 서정주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대표적 친일 문학가이

자 시인이다. 그뿐 아니라 군사 독재 정권도 낮뜨겁게 찬양했던 자다.

서정주는 1940년대 일제를 찬양하고 황국신민화 정책을 선전하고 미화하는 작품들을 발표했다. 당시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일본을 위해 전쟁에 가미가제(자살 특공대)로 죽어 가라고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아래와 같은 시를 쓰며 독사의 혀바닥을 놀렸다. “원수 영미(英美)의 항공모함을 / 그대 몸뚱이로 내리쳐서 깨었는가? / 깨뜨리며 깨뜨리며 자네도 깨졌는가 / 장하도다 / 우리의 육군항공 오장(伍長) 마쓰이 히데오 / 너로 하여 향기로운 삼천리의 산천이여”

이도 모자라 조선인 학생들에게 학도지원병 출정을 독려하는 시를 쓰고 일본 군대를 쫓아다니며 중군 기사를 썼다. 서정주는 자신의 친일 행위에 대해 “일본의 육일승천지세(旭日昇天之勢)” 밑에서 “종천순일파(從天順日派)”로 체념하면서 산 것에 지나지 않았다”

고 말한다. “일본이 그렇게 쉽게 항복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못 가도 몇 백년은 갈 줄 알았다”고도 했다.

일본이 망하지 않았다면 평생 친일을 했을 것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친일이 ‘하늘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면 당시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마져 바친 많은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거스른 사람’들이라는 요설에 불과하다.

‘민족 기상’의 모범이신 전두환

이 “종천순일파”는 해방 이후 권력을 향한 해바라기들이 그랬던 것처럼 반공 열풍에 편승해 재빠르게 친이승만파로 변신했다. “그(이승만)와의 반 해썹의 접촉은 내게는 은근히 큰 힘이 되었다. 늘 짓눌리면서도 끈질기게 뚫고 나온 민족혼의 상징을 그에게서 가까이 느꼈다.” 서정주는 이승만의 전기도 집필했다. 이런 변신으로 서정주는 문학계의 거두가 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초대 문교부 예

술과장 자리에 앉은 것이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8월 24일 <경향신문>에 쿠데타를 지지하는 시(‘혁명 찬(讚)’)를 발표했다. 이후에도 박정희의 베트남 참전 결정을 지지하며 파병을 독려하는 시 ‘다시 비정(非情)의 산하(山下)에’를 쓰고 1975년에는 새마을운동 시찰을 따라다니며 관제용 참관기를 썼다.

1980년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권좌에 오른 전두환을 위해 그는 그해 TV에 출연해 전두환 지지 연설을 했다. 1987년 전두환의 56세 생일 축하장에서는 “민족 기상(民族氣象)의 모범이 되신 분이여! / 이 겨레의 모든 선현들의 찬양과 / 시간과 공간의 영원한 찬양과 / 하늘의 찬양과 두루 님께로 오시나이다”라는 시도 발표했다. 1987년 6월 항쟁 중에는 <문학정신>에 “이 중차대한 역사적인 시점에서 왜 무슨 바람으로 등 돌리고 뒤돌아서 편전을 보며 힐난과 불화 조성과 혼란과 파괴만 일삼고 있

는지 참으로 이해해 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화 열원 민중을 비난하고 당시 태동하던 민중 문학에 저주를 퍼부었다. 일제에 맞서 싸운 사회주의자들과 항일무장투쟁 세력에게 ‘불령선인(不逞鮮人)’ 운운하며 꿈을 깨라던 행적을 다시 보인 것이다.

이렇듯 서정주의 인생에는 일제와 독재 정권에 대한 찬양과 부역의 세월이 오롯이 새겨져 있다. 그 대가로 그는 교과서에 늘 실리는 국민 시인 대접을 받았다. 서정주의 제자 고은 시인마저 “2001년 ‘미당 담론’에서 ‘세상에 대한 수치가 결여된 체질, 시대에 대한 고소 공포증에 가까운 굴복’이라고” 비판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전두환의 역사 왜곡 회고록 등을 보더라도 독재 세력과 우파는 반성을 모른다. 일제와 독재 찬양에 누구보다 앞장선 서정주 따위들을 기리는 사업들이 중단돼야 할 이유다.

이재환

우익 쿠데타의 위협에 처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주의 혁명’의 앞날

[옮긴이] 베네수엘라는 몇 년째 심각한 경제적·정치적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2015년 12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우파들이 더한층 기세등등해져, 고(故) 우고 차베스의 후계자인 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끌어내리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이로 인한 갈등은, 지난 7월 30일 제한의회 선거를 전후로 더한층 격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베네수엘라 내 우파는 물론이고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도, 마두로 정부의 호소로 선출된 제한의회를 거부하고 나섰다.

영국의 사회주의자로서 오랫동안 라틴아메리카의 정치를 분석하고 탐구해 온 앤디 브라운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주간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와의 인터뷰에서, 한때 새로운 변화의 상징처럼 칭송받던 베네수엘라 식 ‘21세기 사회주의’의 경험을 통해 오늘날 갈등까지를 돌아보고, 우파들의 도전에 저지할 수 있는 투쟁의 가능성을 전망한다.



사진에 우고 차베스의 초상화. 베네수엘라 노동자 연대

차베스가 표현했던 변화의 염원을 이루려면 노동계급의 저항을 재건해야 한다

7월 30일 베네수엘라 제한의회 선거 이후, 좌파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반대 운동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리로 나온 시위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이 된 1998년 이래로 베네수엘라 지배계급은 반정부 운동을 격렬히 벌여 왔습니다. 지배계급은 차베스의 정통성도, 노동계급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두로에 반대해 거리로 나온 우파들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고, 저마다 전술이 다릅니다. 어떤 우파는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낫다고 보고, 어떤 우파는 의회 민주주의적 수단을 써서 권력을 잡으려 합니다. 그래도 그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차비스모”[차베스주의]가 이룬 성취를 모두 되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들이 마두로 정부를 공격할 때 들먹이는] 민주주의, 국민, 합헌성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파들은 지난 15년 간의 성취를 되돌릴 권위주의적 질서를 확립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한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 베네수엘라 유권자의 절반은 마두로도 야당도 둘 다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좌파가 여전히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마두로 정부는 일정 수준의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베스만큼은 아닙니다. 마두로는 2013년에 대통령에 당선했습니다. 그때 그는 우파 후보 엔리케 카프릴레스 라돈스키보다 고작 1.1퍼센트 더 득표했을 뿐입니다. 그 전 선거들에서 차베스는 카프릴레스를 10퍼센트 이상 차이로 눌렀었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계급이 좌파를 얼마나 지지하느냐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노동계급은 2000년대 초 우파들에 맞서 차베스를 지키고자 조

직적으로 싸웠습니다. 노동자들이 우파에 반대하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2000년대 초반과는 사뭇 다릅니다. 노동자들 대부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차비스모”에 투표하겠지만은, 투표를 기권하는 비율이 그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마두로가 속한 여당 베네수엘라통합사회주의당(PSUV)이 타락하면서, 그 당의 노동계급 기반은 사기가 떨어지고 조직력이 약해졌습니다. 베네수엘라통합사회주의당에서 책임성 없는 관료가 성장했고, 부패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노동계급 다수의 지지를 받아 왔지만, 노동계급이 마두로를 지키려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베네수엘라 노동계급이 [마두로보다] 차베스를 더 가까이 방어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그들은 어떻게 차베스를 방어했습니까?

“차비스모”가 난데없이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1989년 카라카스 봉기 이래 베네수엘라에는 신자유주의, 긴축, 우파에 맞선 강력한 저항 전통이 죽 이어졌습니다. 카라카스 봉기는 IMF의 “구조조정 패키지”에 맞서 수도 카라카스에서 벌어진 대중 항쟁이었습니다. IMF의 “구조조정 패키지”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이었습니다. 미국의 학자이자 저술가인 조지 시카리엘로-마허는 자신의 책 《우리가 차베스를 만들었다》에서 차베스는 대중 운동의 일부는 아니었지만 그 염원을 받아안았다고 지적합니다. 차베스는 노동계급의 요구를 분명히 표현했던 것입니다. 차베스가 대통령이 된 이후 2002~05년에 대중적 수준의 활발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의 핵심적 전투가 있었습니다. 첫째 전투는 2002년에 우파들이 차베스에 맞서 쿠데타를 획책한 것이었습니다. 이 쿠데타 시도는 영리한 정략이 없었고 대중 운동에 의해 중도에 꺾였습니다. 특히, 카라카스의 “바리오스”라는 빈민 거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듬해인 2003년, [베네수엘라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 기업의 기업주들이 무자비한 직장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우파들은 베네수엘라 경제 전체를 희생시켜서라도 권력을 되찾고 싶어했습니다.

이번에도 석유 노동자 등 노동계급의 대중 투쟁으로 기업주들의 시도는 패배했습니다. 그 다음해인 2004년에 우파들은 헌법적 수단을 이용해 차베스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이 역시 커다란 거리항의 운동으로 무력화됐습니다.

차베스 정부는 대중 운동이 활발했던 이 시기에 보건 의료 · 교육 · 주택 등 여러 부문에서 개혁을 이뤘습니다. 기층 노동자들도 주도력을 발휘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주민자치평의회를 통해 노동계급 거주 지역에서 더 많은 자치권을 누렸습니다. 노동자들은 기존 어용 노동조합의 관료적 통제에서 벗어나 민주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산업에 대한 노동자 통제를 둘러싼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차베스의 구상이 정말로 사회를 더 낮게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대세였습니다.

그런 개혁 조처들은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개혁들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유가의 대폭 하락입니다.

차베스의 개혁들은 당시의 원자재 호황, 특히 석유 산업 호황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출국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호황이 끝났습니다. 개혁의 지체는 심각한 수준의 부패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기층 노동자와 민중을 대변하지도, 그들에 책임지지도 않는 새로운 ‘차베스주의’ 지배계급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부패 정치인 계급으로, 국가 기구를 장악해 치부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인들은 그들을 “볼리바르주의적 부르주아”라고 부릅니다. 경제에서 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내각과 주지사의 절반 이상이 군 장교들입니다. 군부는 예컨대 금광 채굴 같은 경제의 주요 부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부는 어떤 면에서도 노동계급에 책임지지 않는 존재가 됐습니다.

기층 노동자 조직이 여전히 있습니까?

노동계급과 빈민들이 [차베스주의자들에] 등을 돌리고는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들은 우파에 매우 적대적입니다. 대중 사이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는 구호는 “그들[우파]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입니다.

노동계급 거주 지역에는 여전히 기층 대중 조직이 많습니다. 베네수엘라통합사회주의당 내부에도, 매우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지만 존재감이 있는 좌파들이 있습니다. 그 좌파들은 차베스주의 정부 하에서 자라난 관료주의와 부패를 줄곤 비판해 왔습니다. 그 좌파들은 지금도 간행물을 내며 운동을 건설하려 애쓰고 있고, 차베스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기층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노동계급 운동이 지금 우파에 맞설 수 있는 상태입니까?

우파들은 막판 승부수를 던지려 합니다. 나라를 통치 불능 상태로 망가뜨려 정부가 실각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노동계급이 이에 저항할 힘이 없으면, 그런 흐름은 돌이킬 수 없겠지요. 우파 재집권을 저지할 유일한 방법은 노동계급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중 운동을 벌여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뿐입니다. 타협할 생각이 없는 우파들에게 그럴싸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 즉 마두로처럼 하는 것으로는 우파를 저지할 수 없습니다. 마두로와 유사하게, 저항 운동의 애초 요구를 우파와의 타협 속에서 훼손해 가는 일은 볼리비아와 에콰도르 등 몇몇 다른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곳들에서도 타협으로는 우파의 공세를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노동계급의 저항이 재건돼야 합니다.

우파들은 베네수엘라 사례를 보면 좌파 정책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사회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베네수엘라 노동계급을 방어하고 “볼리바르주의 혁명”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볼리바르주의 혁명”은 거대한 변화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볼리바르주의 혁명”이 계급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국가에 도전했던 것은 아니지만, 노동계급 사람들에게 분명 변화를 줬습니다. 우파 재집권의 결과가 무엇일지는 분명합니다. 잔혹한 권위주의 통치가 도래할 것입니다. 마두로가 승리하든 우파 야당이 승리하든 상관없다는 식의 생각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정치 상황은 베네수엘라에도, 라틴아메리카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좌파의 교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특정 개혁주의 전략을 마냥 응원하거나, 그 전략의 오류를 보아 넘기거나, 그 전략의 중대한 오류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좌파적 지도자들에게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은 노동계급 대중이 자력으로 해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파적 지도자들의] 관료화, 부패, 노동계급 운동 경시에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노동계급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핵심적 구실을 한 사례입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사회가 더 낮게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566호 / 번역 김준호

※ 본지 웹사이트(wspaper.org)에서 ‘베네수엘라 군 기지 습격: 우파들이 좌파 정부에 대한 폭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도 보세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핵발전소는 노동계급 전체의 안전에 엄청난 위험이다

문재인, 탈핵을 60년 뒤로 미루다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설비에비율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핵발전소를 계속 짓지 않으면 전력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다. 보수 언론은 정부가 기업주들에게 전력 사용을 줄일 것을 지시한 결과라며 흡집 내기에 열을 올리지만 군색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이는 그동안 전임 정부들이 전력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평범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전가해 왔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는 집권 세 달 만에 사실상 '탈핵' 공약을 거둬들였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건설 중인 핵발전소 다섯 개 중 두 개만(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그조차 최종 중단 여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물러섰다. 최근에는 이른바 '출구 전략'이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 나왔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고, 대신 노후원전 1~2기를 폐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은 보수 언론과 자본가들의 탈핵 반대 입장을 비판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은근슬쩍 신규 핵발전소 가동을 기정사실화 했다.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이라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된다. 앞으로 60여 년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

60년 뒤에 약속을 지키겠더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60년 뒤면 문

재인은커녕 민주당도 남아있을지 모르는데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 무엇보다 이는 앞으로 60년 동안 후쿠시마 사고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다. 후쿠시마 핵발전소도 간간히 기로 이름난 일본에서 모든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다.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 수백만 분의 1의 확률일지라도 한번 사고가 나면 수세대에 걸쳐 사실상 영구적인 피해를 남기기 때문이다.

안전한 핵은 없다

탈핵 공약 후퇴를 우파의 반발 때문인 듯 정당화하는 문재인은 진보·좌파 진영의 비판을 단속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개혁을 재촉하고 비판하면 도리어 우파에게 힘을 실어줄 뿐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다.

이는 매우 낮은 수범인데 노무현 정부도 이런 식으로 진보·좌파 진영을 단속하려 했다. 당시 일부 NGO 리더들과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이런 논리를 수용해 '개혁' 정부에 비판을 야겼지만, 그 결과 돌아온 것은 이라크 파병, 노동법 개악, 한미FTA 추진 등이었다. 정작 노무현 자신이 약속한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 개혁, 검찰 개혁 등은 우파의 반발에 밀려 스스로 꼬리를 내려버렸다.

자본가들에게 기반을 둔 정당인 민주당(비록 자본가들의 제2선호정당일지라도)이 자본가들의 이익을 거스르는 것은 오로지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정권 자체에 위협이 될 정도로 클 때뿐이다. 그러므로 자본가 정당들 중 어느 한 편과 동맹을 맺는 전략은 운동을 자기제한적으로 만들어 오

히려 승리에서 멀어지게 할 뿐이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의 핵폐기장 건설 시도에 맞서 격렬한 투쟁을 벌인 부안에서는 이를 막아냈지만, 주민투표 같은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자는 정부 논리를 수용한 경우에서는 맥이 패배했다.

따라서 최근 일부 환경운동 리더들이 문재인 정부를 정면 비판하기를 꺼리는 것은 우려스럽다. '문재인이 아니라 산자부 관료, 핵산업계와 싸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선출된 대통령의 지침에 저항하는 일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개혁' 의지가 분명할 때 고려할 일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문재인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전에 스스로 탈핵을 먼 미래의 일로 미뤄버렸다. 핵잠수함 도입 추진에서 보듯 한국의 핵기술 개발에 의욕을 갖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문재인이 아니라 관료들이 문제라는 주장은 부적절한 문재인 변호론일 뿐이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산자부 관료들과 핵산업계의 반대 때문에 탈핵을 밀어붙이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에게 '탈핵' 의지가 없다고 비판적이 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탈핵 여론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말로나마 탈핵을 약속하게 된 것은 이런 압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탈핵 운동 진영은 문재인 '개혁 정부 vs. 핵마피아' 프레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압력을 조직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후퇴를 폭로하고 항의하는 것은 그 필수불가결한 출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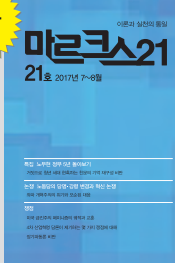
장호중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① 셰슈얼리티와 자본주의 ② 강간과 포르노 그리고 자본주의
- ★ [베네수엘라] 우파들이 좌파 정부에 대한 폭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 ★ [분단과 한국전쟁] 해방 직후에 옴튼 희망이 깃발힌 역사
- ★ 바른정당 새 대표 이해훈 - 뺏속까지 반노동·친기업적 우익 정치인
- ★ 분열하는 국민의당 - 안철수의 '국단적 중도주의' 헛발질
- ★ 이주노동자를 죽음과 고통으로 내몬 고용허가제 13년
- ★ '4·24 총파업' 참가로 기소된 김영의 씨의 결심 재판 방청기

신간



특집 노무현 정부 5년 돌아보기
거짓으로 청년 세대 현혹하는 친문의 기억 재구성 비판
논쟁 노동당의 당명·강령 변경과 혁신 논쟁
좌파 개혁주의의 위기와 모순된 대응
쟁점 미국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궤적과 교훈
4차 산업혁명 담론이 제기하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장기파동론 비판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압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회비 기증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